


| | | | | |
|--|--|-----|-----|--------------|
|  보건복지부 | 보 도 자 료 2월 24일(목) 중보위 시작(16:00) 이후 보도 | | | |
| 배 포 일 | 2021. 2. 24. / (총 9매) | | | |
| 보육정책과 | 과 장 | 유보영 | 전 화 | 044-202-3540 |
| (보육시행계획 총괄) | 담당자 | 이승묵 | | 044-202-3541 |
| (보육교사 양성체계) | 담당자 | 최기전 | | 044-202-3552 |
| 보육기반과 (어린이집 방역 관리) | 과 장 | 이승현 | | 044-202-3580 |
| | 담당자 | 김남철 | | 044-202-3593 |

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, 2022년 보육 시행계획 확정 [2.24]

-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심의
- '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모의적용 연구' 결과 보고
-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

□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 2월 24일(목)에 2022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(이하 '중보위', 위원장 : 양성일 제1차관)를 열어, 「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」, 「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」 등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회의는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*가 새로 구성된 후 세번째로 개최되었다.

* 전문가, 시민단체 등 공익대표, 원장·보육교사·부모 대표, 보육 관련 단체·기관장, 정부위원 등 19명으로 구성

-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(2020.9월~2022.9월) 보육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, 보육과정 개발 및 어린이집 평가제도 등 주요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-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,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(심의안건1) >

- 2022년 시행계획은 2018년 마련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중점 추진할 정책과제로,
- 위원회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4개 중점 분야 및 분야별 세부 시행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2022년 시행계획안을 확정하였다.

* 2022년 보육 시행계획 세부 시행과제 내용 : <붙임 2> 참조

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

- 2025년까지 '공공보육 이용률 50%'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지속 확충하고 보육 교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하며,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의 지방 이양에 따라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 매뉴얼 개정으로 공공보육 품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.

② 보육 지원 체계 개편 연착륙을 위한 지원

- 2020년 3월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,
-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적정 보육료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 조사('22.3월~)를 추진할 예정이다.

③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

- 보육교사 양성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과제 도입 관련 사전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,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추진하는 한편,

-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보조·연장 보육교사 및 대체 보육교사 지원도 계속 확대*하기로 하였다.

* ('21) 보조·연장교사 6.1만 명, 대체교사 4,136명 → ('22) 보조·연장교사 6.1만 명, 대체교사 4,836명

- 지속 가능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편도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.

-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평가체계 개편 방안*을 도출('22.3월)하고,

* ①과정 중심의 정성평가, ②어린이집 주도의 자율적 질 관리, ③통합적 품질관리

- 어린이집 자체 점검 프로세스 개발, 자체(셀프) 모니터링 활성화 및 결과 환류를 통해 어린이집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.

④ 부모 양육지원 확대

- 지역사회 내 부모교육과 상담, 장난감대여 및 시간제 보육 등 종합적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확충*하고,

* 충남 당진군, 부산 영도구, 전북 김제시

- 가정양육 중인 영아에 대해 일시적·단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도 계속 운영*해나갈 예정이다.

* ('19년) 490개 반 → ('20년) 690개 반 → ('21년) 890개 반 → ('22년) 890개 반

<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모의적용 연구 결과 보고 (보고안건1) >

- 위원회에서는 2021년 진행한 '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을 위한 모의적용'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.

- 학과와 지역을 고려하여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15개 양성 기관에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조사를 진행해 보육교사 양성

학과 인증지표의 타당도와 현장 적용도를 검증하였다.

- 모의적용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난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이나 별도 지표 개발을 모색할 예정이다.
- 또한,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양성학과 인증 방식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관련 단체 협의나 공청회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.

<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(보고안건2) >

- 위원회에서는 최근 코로나19(오미크론) 확산세를 고려하여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다.
- 정부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일시적 이용제한 선(先) 조치(보건당국과 사후협의)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접촉자 확인·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,
 - 어린이집의 감염 유인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영유아·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(자가진단키트)를 무상 지원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핵심 기능인 보육활동이 중단없이 유지·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위기대응체계(업무연속성 계획) 마련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.
- 회의를 주재한 양성일 제1차관은 “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공 보육 이용률 35.3% 달성, 보조·연장보육 및 대체 보육교사 지원 확대, 2022년 보육료 평균 단가 5.2% 인상* 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조치들이 시행되었다”라고 하면서,
 - * '19년 표준보육비용 대비 평균 103.0% 달성
- “올해에도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%의 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,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·연장보육 및 대체

교사 추가배치,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안정적인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”이며,

- “정책 현장 및 국민 여러분과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행복한 가족을 위한 기초가 되는 든든한 어린이집을 만드는 정책 수립에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- <붙임> 1.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요
2. 중앙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심의 안건

붙임 1

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요

- 법적 근거 : 영유아보육법 제6조
- 기능 :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·사업·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항 등 심의
 - 보육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
 - 표준보육과정의 개발
 -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
 -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
 -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구성 : 보건복지부 산하
 - 20명 이내의 위원 :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
 - 위원장 : 보건복지부 제1차관
 - 부위원장 : 위원 중 호선
 - 위원 자격
 - 보육전문가, 어린이집의 원장, 보육교사 대표, 보호자 대표, 공익을 대표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
 - * (위원 명단)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,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,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종규회장,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최은영 교수,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공동대표, 아이위즈어린이집 김윤희 보육교사,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최영 교수 등
 - 위원 임기 :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

붙임 2

중앙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심의 안건

안건

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(요약)

1 보육의 공공성 강화

- 2025년까지 ‘공공보육 이용률 50%’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지속 확충
 - 기존 신축 방식 외 매입, 공동주택 관리동 리모델링, 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 적극 지원
- 국공립어린이집 대규모 확충에 따른 질 관리 병행 추진
 - “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무교육과정”의 대상을 확대하여 신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질 제고 및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
 - * 장기임차 방식 등 신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(장기근속자 등) 대상으로 집합 교육 및 컨설팅 실시
-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추진(~'22.5월)
 - 사업장의 응답 편의 제고를 위해 문항 수정, 각 조사기관별(교육부: 교육기관, 고용부: 사업장, 지자체: 지방행정기관 등) 실태조사 관리자 교육
-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('21.12), 지방이양에 따라 지역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매뉴얼 개정
 - 지정, 운영기준 관련 법령 수준의 공통 요건, 지역 자율성 확대를 선택·권고 요건 등 표준안 마련, 매뉴얼 반영
 - ※ 최소 지정요건 및 시도 사업계획으로 공고한 별도 지정요건에 대한 지표별 점수 자율 설정

2 보육체계 개편

- 연장보육 수요조사 및 모니터링 지속 실시
 - 연장보육 이용 및 보육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별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계획 수립(~'22.1월) 및 지속 모니터링 실시
- 적정 보육료 산정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조사 실시(3월~)
- 누리과정 교사 대상 연수* 및 교육 이수현황 지속 모니터링, 표준보육과정 교육, 컨설팅 진행(중앙육아종)
 - * 대면 원칙,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비대면 허용

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

-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관련 사전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, 개편 초안* 마련(~'22.3월), 관련 법령 개정 추진(~'22.12월)
 - * (재)교육·양성체계뿐만 아니라, 자격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 방안 마련 추진
- 2년 이상 어린이집 근무 경험이 없는 보육교직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 미종사자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(야간시간, 주말반 등)로 확대하여 운영(한국보육진흥원)
-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민간·가정 어린이집 교사 보수 수준 개선안 마련
 - 민간·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를 최소 국공립 보육교사의 급여(1호봉) 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, 급여 지급 수준을 모니터링하고,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
- 보조·연장·대체교사 인력 지속 확대 및 인력 채용, 연장보육 이용, 보육현장 수요 등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

- 교사 근무환경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* 관련 기관 및 지자체 간담회 추진

*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에 따른 재정소요, 교사수급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 필요

-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평가체계 개편방안*을 도출('22.3월)

* ①과정 중심의 정성평가, ②어린이집 주도의 자율적 질 관리, ③통합적 품질관리

-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공립, 사회복지법인 등 공공성이 높은 기존 어린이집에 증개축, 개보수 등 환경개선 지원 기능보강비 38억 원(484개소) 지원

* 증개축(5개소), 개보수(200개소), 장비비(279개소)

- 열린어린이집 선정 독려, 국공립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화 확대 추진

* '21년 8,800개소(전체 25%) → '22년 9,900개소(전체 30%)

4 부모양육 지원 확대

- 부모교육 추진체계 정비,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(교육·상담 등) 확보 등을 통한 양육정보·서비스 지원 강화

- 육아종합지원센터 3개소 확충*하여 지역사회 내 부모교육 및 상담, 체험프로그램, 장난감대여 및 시간제보육 등 종합적 가정양육서비스 제공

* 충남 당진, 부산 영도, 전북 김제

- 가정에서 가까운 보육인프라 활용을 통한 시간제보육 확대를 위해 신규모형 시범사업 추진 및 제도개편(안) 마련